



대한노동뉴스

## 통합공공연맹 출범과 1999년 사업방향

이승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지난** 3월 13일 공공연맹, 공익 노련, 민천노련으로 나눠

져 있던 공공부문노동자들이 하나의 조직, 즉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으로 통합되었다. 지난 1년간의 논의 끝에 어려운 조건들을 극복하고 하나의 산별연맹으로 거듭난 10만 조직은 앞으로도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나

가야 하는 미완의 그릇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목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너무 단순한 질문일 것이다. 물론 우리의 목표는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일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노동해방' 일 것이다. 이 땅 모든 노동자들의 목표와 다를 수 없다. 중

요한 것은 어떻게 갈 것이냐는 경로의 문제와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는 것이다.

먼저 통합의 주체였던 세 조직의 주체 조건들을 살펴보면 연맹의 역사나 운영체제, 가맹노조수, 조합원수, 사업 방식 등 여러 면에서 혁격한 차이가 있다. 한편에서는 “한지붕 세가족”的 우려와 하향평준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은 3조직통합은 완결체가 아니며, 아울러 투쟁을 기반으로 결합되었다는 점이다.

통합공공연맹은 공공대통합을 전제로 출발하여 일차로 3조직 통합을 이뤄낸 것이다. 타 공공부문 연맹들과의 2차 3차 통합작업을 통해 대통합을 이뤄낼 것이며, 1999년 민주노총 투쟁의 선봉 역할을 담당하여 살아있는 연맹으로 조합원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민주노총 강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민주노조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직 크기만 커졌다고 해서 발전하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외형의 틀보다는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힘든 과정일 것이다. 투쟁을 통해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가 통합의 3주체에게 분명히 있으며, 논쟁 보다는 실천이 현 정세에 맞다는 결의가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통합대의원대회 다음날 치뤄진 공공연맹 출범식 및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에

13,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용산역에 모임으로써 확인된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근로 성격상, 25~35%의 조합원들이 일요일에도 근무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참석가능 조합원의 20~25%가 참석한 대규모 결의대회였으며, 참여한 조합원들의 결의 또한 1998년의 폐배를 딛고 일어설 만한 높은 수준이었다.

단일지도체제를 세우지 못하고 오는 7월까지 공동위원장제를 채택한 것도 당면 투쟁을 힘있게 치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를 ‘무늬만 통합’이라는 등 비난하는 여론도 있지만 그러한 비난은 1999년 투쟁을 통해 정리될 것으로 확신한다.

공공부문노동자들의 대통합은 시작되었다. 통합연맹 출범의 의의와 1999년 사업기조와 방향, 전체 노동운동 진영에서 통합연맹의 역할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통합공공연맹 출범의 의의

통합공공연맹 출범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공공 대통합의 단초를 열었다.
- ② 공공 대산별 건설 경로를 정립했다.
- ③ 연대투쟁의 틀을 하나의 조직으로 발전시켜 투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 ① 공공 대통합의 단초를 열었다

먼저 공공 대통합의 단초를 열었다는 것은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통합공공연맹의 출범은 단지 3조직의 통합만을 전제로 출발한 것이 아니다.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기 위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조건을 고려하여 전국공공부문노동조합연맹, 전국공익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민주철도노동조합연맹이 먼저 통합을 추진한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민주노총 산하 병원 베스 화물 등과의 통합, 그리고 범위를 더 확장하자면 언론 건설 교육 등과의 통합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또한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노조들과의 통합도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렇듯이 금번 통합공공연맹건설은 시작에 불과하며, 대통합의 기반을 다졌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공무원노조의 건설 등 조직확대 및 단결권 쟁취사업의 주체를 바로 세웠다는 것도 큰 의의일 수 있다. 지금 준비중인 공무원직장협의회 발족 및 더 나아가 노조로의 전환, 합법성 쟁취 등이 통합공공연맹의 중심사업으로 배치될 것이다.

## ② 공공 대산별 건설 경로를 정립 했다.

이제까지 공공산별은 기업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공공/민간을 구분하는 자본의 관계에 따른 건설경로

설정과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해당 기업 노동자들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중심으로 보는 전설경로로 나뉘어져 통일성을 이루지 못했다.

통합이전에 옛 공익노련의 경우 공노대 가입을 둘러싸고 공공/민간의 논쟁이 상당기간 존재했었고, 옛 공공연맹의 경우 대부분 자본의 관계에서 출발하여 가맹조직이 이루어졌으며, 옛 민철노련의 경우 공공산별이나 운수산별이냐라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었다. 그러나 3조직이 통합됨에 따라 큰 공공 대산별의 건설은 자본 관계가 아닌 노동의 성격에 따른 공공성과 공익성을 중심으로 한 영역 설정이 기본방향으로 정리되었다. 통합공공연맹은 사회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민간의 노동자를 포괄하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공대통합과 함께 공공산별노조 건설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③ 통합공공연맹의 출범은 세 조직의 투쟁사업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어 세웠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요구안 자체도 단위사업장 차원이나, 몇몇 사업장의 요구를 묶는 정도가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자 전체의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을 배치하며, 나아가 전체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위해 투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통합공공연맹은 사회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민간의 노동자를 포괄하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공대통합과 함께 금금산별노조 간섭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이 통합공공연맹 출범의 의의는 외형 성장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 '규모의 경제' 문제나 10만명이 갖는 조직규모는 부수적인 의미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현재 조건과 민주노총 안에서의 10만, 20만 통합논의는 무의미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의 문제이며, 3 조직의 해산과 통합연맹의 건설은 철저히 기존조직의 과거를 통한 새로운 조직건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통합공공연맹을 출범 시켰고, 미래를 위한 조직으로 발돋움 시킬 것이다.

## 2) 통합연맹의 1999년 사업기조와 방향

통합공공연맹 출범에 즈음한 1999년 정세는 한국경제의 종속성과 독점의 심화, 고실업의 지속, 비정규직의 확대 등 노동시장의 불안정 심화, 임금삭감 및 퇴직급제도 개악, 연봉제 도입 및 노조 무력화 시도, 정치질서 재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지속 등….

노동계는 투쟁을 회피할 수 없는 바쁜 꿀목에 몰리고 있다. 투쟁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나, 투쟁을 위한 주체역량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그러나 금년 투쟁에 배수진을 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의 무력화와 함께 노동자들의 삶은 1970년대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투쟁

할 수밖에 없음이 통합공공연맹의 입장이다.

1999년 통합공공연맹의 중심사업은 다음과 같다.

- ① 1999년 투쟁의 조직과 승리이다.
- ② 통합연맹의 안정화 사업이며, 이는 조직통일화 사업에 기반한다.
- ③ 공공대통합(통합확대)와 산별노조 전환추진이다.

### 투쟁사업

먼저 투쟁사업을 살펴보면, 1999년 투쟁은 작년투쟁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대정부투쟁을 전면에 배치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합공공연맹은 통합이 전부터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여 요구안을 통일하고 대정부교섭을 요청하는 따위의 사전 준비를 해왔다.

예년과 같이 단위노조의 사안을 중심으로 공동투쟁을 전개한다면 결국 정권과 자본의 분리정책에 밀려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구조조정 저지와 함께 6대 요구안, 즉 ① 노동시간 단축, ② 공기업 공익성 유지, 공기업 재벌매각·해외매각 반대, ③ 연봉제 철회, ④ 퇴직금제도 개악·복리후생제도 축소 철회, ⑤ 공공부문 임금 대정부 직접교섭, ⑥ 노동조합-노동자대표-의 경영참여를 내걸고,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자'는 목표아래,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언하였다.

대정부투쟁을 힘있게 진행하기 위해 통합공공연맹은 단위노조의 노사교섭을 중단하고 교섭권을 연맹으로 위임할 것을 결의하였고, 쟁의발생 결의, 쟁위 행위 찬반투표 실시를 4월 3일까지 완료하고 4월 중순 총파업 투쟁을 목표로 단위노조의 비상대기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발령한 상태이다. 대정부투쟁을 위해 연맹은 기획예산위 위원장을 만나, 우리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교섭에 임하던지, 정부의 지침을 철회하던지 양단간의 결정을 3월 24일까지 할 것을 요구하였고, 정부의 반응이 없다면 3월 24일 기획예산위 앞 집회를 시작으로 대정부 타격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4월 10일까지도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총파업투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투쟁전략과 전술은 이미 세워져 있다. 민주노총과 최종적인 조율을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정세 및 정부의 태도변화에 따라 전술변화를 고민할 계획이다. 1999년 투쟁이 1998년과 다른 것은 완벽하진 않지만 1998년보다 준비된 투쟁이라는 점이다. 대중으로의 확산도 조직간 편차는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내실 있게 진전되고 있고, 투쟁의 주력대오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현재의 고민은 민주노총 산하 다른 연맹과의 투쟁기조 및 시기조정이며,

다른 연맹들도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없이는 단위노조 교섭 및 투쟁이 의미 없음을 공감하고 있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권도 과국을 원치 않는다면 우리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작년과는 투쟁의 본질이 다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권력의 유지에 무관한 투쟁이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통합공공연맹은 금년의 투쟁을 통해 조직의 통일과 안정을 이뤄내고, 폐쇄한다면 통합된 연맹이 산화할 수밖에 없다는 각오로 1999년 투쟁에 임하고 있다.

“투쟁 속에 건설하는 연맹!” 이것이 통합공공연맹의 상인 것이다. 또한 연맹은 상반기 투

쟁사업과 병행하여 연맹안정화 사업을 추진하여 연맹산하 109개 노조 155개 사업장을 통일시키고, 재정 및 의결기구 안정화, 상근역량 확보 등을 통해 10만 조직에 걸맞는 조직체계를 만들 이 갈 것이다. 금번 대정부투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대의원대회를 통해 규약에 따른 단일지도체제로 지도부를 선출하고, 고용안정 및 생존권 쟁취·공공대통합과(통합확대)과 산별노조 전환 추진·진보정당 건설·노동3권 사수와 현장조직 강화·교육 및 정책활동

의 회기적 강화를 주요사업 방향으로 하여 민주노총의 중심 산별연맹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급변 대정부투쟁의 승패에 관계없이 그 결과에 따라 우리는 산별노조 건설과 정치세력화를 위한 진보정당 건설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단기간 안에 연맹

**구체적인 투쟁전략과  
전술은 이미 세워져 있  
다. 민주노총과 최종적  
인 조율을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정세 및  
정부의 태도변화에 따  
라 전술변화를 고민할  
계획이다.**

중앙으로의 구심력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산별노조가 구호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건설경로의 설정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신뢰이며, 중앙이 현장에 대해 어떻게 책

임지고 지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제정과 사람의 중앙 집중이다. 바꿔 말하면 기업별 노조의 권리가 중앙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반기사업의 중심은 산별노조건설의 종합계획을 제시하고 단위노조간부들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현장토론을 전개하는 수준일 것이다. 더디 가더라도 현장조합원들이 내실있는 토론을 통해 조합원들이 주체로 서는 산별노조 건설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공공연맹은 청립과 함께 해

소를 목표하고 있는 조직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진보정당 건설에 적극 동참하는 사업이 하반기사업의 한 축일 것이다. 지난 대선 참여부터 진보정당의 상에 대한 많은 이견들이 표출되고 있다.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한 경로인 진보정당 건설이 노동자중심의 정당이

공공노동자  
통일시키기  
취와 조작  
서의 역할  
할 것이며  
성원들의  
적인 사회  
기반을 확장  
가되어야

사실 1999년 대정부부평 사업과 연  
맹안정화 사업 외에는 구체적인 추진계  
획이 잡혀있지 않다.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계획되어  
있으나, 하반기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추  
진계획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  
며, 1999년의 전체 사업계획(하반기)

중심으로)을 1999년 4월말까지 작성할 계획이다. 5월말까지는 투쟁사업을 중심으로 연맹통합의 의미와 통합연맹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확고히 하고, 이를 통해 현장조합원들과 함께하는 연맹으로 거듭 태어나 하반기사업을 추진하고 광공노동자들의 희망으로 위치할 것이다.

### 3) 통합공공연행의 역할 과 과제

통합공공연맹의 역할은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이 사회의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인식시키고 행동하게 하며, 나아가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해방을 위

제 충실히 복무해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노총의 강화에 주  
력하여, 민주노총이 1,300만 노동자와  
4,000만 민중의 희망으로 자리할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양대산맥으로 민주노총을 발전할 수 있도  
록 10만 조직으로의 내용을 충실히 해  
야 할 것이며, 산하 노조의 투쟁을 책임  
지는 연맹이 되어 민주노총이 총연맹으  
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뒷  
받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정권의

정책기조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여 민주노총 투쟁의 선봉대로서 대정부투쟁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공공노동자들의 운동을 통일시키고, 단결권 쟁취와 조직확대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이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와 안정적인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보하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공공연맹의 과제는 이미 사업추진 방향에서도 언급했듯이, 산별노조건설과 노동자정치세력화가 설정되어 있다. 순위를 정할 수 있지만 산별노조건설은 공공대통합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며, 노동자정치세력화는 당면한 진보정당건설 속에서 어떻게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이루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또한 준비중인 공무원직장발전협의회의 성공적인 설립과 공무원노조로의 전환, 그리고 단결권 쟁취를 통한 조직확대 추진도 중요 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공공부문의 미조직사업장 조직화와 비정규직 조직화를 통한 비정규직 확대 저지 및 조직확대 추진, 공공부문 임금결정 구조의 개선(대정부 직접교섭 또는 공공부문임금 심의위 구성 등), 노동3권 시수와 현장 활동가 양성을 통한 현장조직 강화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연맹의 과제가 대부분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사항들이다. 이는 통합공공

연맹 건설이 갖는 의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여러 난관도 있었고, 진통도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통합공공연맹의 지상최대 과제는 통합공공연맹을 해소하는 것임을 다시한 번 강조할 수밖에 없다. 조직을 건설하면서 파괴를 먼저 생각한다면 우매한 사람들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제 출범한 공공연맹은 공공연맹을 끝임없이 해산하고 더 크게 뭉쳐 나아갈 것이며 결국 크게 뭉친 조직을 해산하고 하나의 노조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이자 최대 과제이다.

많은 어려움을 딛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 건설되었다. 세 연맹의 조합원들은 이제 새로운 통합공공연맹 깃발아래 숨쉬고 있다. 이제는 힘찬 투쟁만이 놓여 있다. 반드시 전너야 할 강이라면 어깨동무하고 함께 전날 것이다. 이왕에 젖을 옷이라면 벗어버리고 뛰어들 것이다. 첫 마음으로 출발하는 통합공공연맹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많은 동지들께 감사드리며, 더 많은 자도편달을 부탁드린다. ♦